

법무부, 「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고 대응방향」 마련 - 정당한 직무집행 교도관에 대한 제도적 보호 강화 -

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‘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행위’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,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「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.

이번 방안에는 ▲법률 제·개정 등을 통하여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 비용 지원 ▲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▲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▲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입법·예산 확보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법무부는 앞으로도 교도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, 수용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인권과 질서가 조화된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.

담당 부서	교정본부	책임자	과 장 정 진 (02-2110-3450)
	보안과	담당자	서기관 김세정 (02-2110-3381)